주간통일정세 2008-41(2008.10.06~10.1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41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김정일, 창당 축전 외국정상들에 답전(10/11,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수립 60주년(9.9) 축전을 보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외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정당 지도자들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 **北김정일 군시찰 사진, '정상 통치' 확인(10/11,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와병설 속에 모습을 감췄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대를 시찰하는 자신의 사진을 11일 오전 북한 TV방송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내외에 건재를 과시, 북한 매체들이 9월 4일 김 위원장의 축구경기 관람 소식을 전하고 노동당 창당 기념일인 10일엔 그의 행사참석 보도없이 한달여 전 노동신문 등에 보냈던 '담화'를 밤늦게 전문소개할 때만 해도, 외부 관측통은 그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조치들로 보면서도 '증빙'자료가 없는 점 때문에 판단에 일말의 유보를 뒀었음.
  - 북한 매체들은 조선중앙통신이 새벽 1시42분께 김 위원장이 821군부대 산하 여성포병중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7시간만인 오전 9시께 조선중앙TV가 관련 사진 10장을 신속히 공개하고 오후 2시20분께는 조선중앙통신이 더 또렷한 사진 2장을 보도

- **김정일, 노동당 창건행사 불참(10/10, 연합)**
  - 뇌혈관 계통 이상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66) 북한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인 10일에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지난 8월 14일 군부대 시찰 보도 이후 이날로 57일째 은둔
  - 정부 당국자는 "10일 밤까지 김 위원장의 모습이나 동향을 보도한 북한 매체는 없다"며 "모습을 공개할 만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언급, 김 위원장이 9월 9일 정권 창건 60주년에 이어 노동당 창건일에도 등장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 이상'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될 전망

나. 정치 관련

- **北, 김정일 군 시찰·담화 반복 보도(10/1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북한 언론매체들은 11일 와병설이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시찰과 담화 발표 소식을 반복 보도

○ 김정일, 담화발표 10·4 이행 강조(10/10,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누구나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
- 이들 방송은 김 위원장이 한달여전 북한정권 수립 60주년(9월9일)을 앞둔 9월 5일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는 장문의 담화를 줬다며 담화 전문을 보도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같은 김 위원장의 입장은 이미 북한 고위인물들과 언론매체들에 의해 반복 주장돼온 것이지만 담화 형식을 통한 김 위원장의 직접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
- 김정일은 담화에서 두 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라고 규정하고 "반통일 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
- 담화에서 그는 북한 정권 60년사를 개관하고 앞으로도 자신의 '선군정치'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무엇보다 사회주의 조국의 정치사상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교육의 강화를 강조
- 김 위원장의 담화는 1만9천여자 분량으로 방송 아나운서가 50여분에 걸쳐 내용을 소개

○ 北, 노동당 창당 기념일…김정일 보도 없어(10/10, 연합)

-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당 63주년을 맞아 이렇다 할 기념행사는 열지 않은 채, 언론매체를 통해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력'을 찬양하고 "일심단결"과 "절대적 충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
- 10일 오후 현재 노동당 창당 63주년관련 행사는 당·군·정 간부들의 고 김일성 주석 묘소인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주민들의 만수대언덕 김일성 동상 참배와 김일성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제76권 출판,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촘말리 사야손 라오스 국가주석,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각 수반 등의 꽃바구니 전달 소식이 전부
- 노동신문은 '일심단결의 기치 높이 전진하는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는 제목의 기념사설을 통해 노동당은 "선군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라며 당의 '영도적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전체 주민들에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를 삶과 투쟁의 제 1 차적 요구로, 확고부동한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 보위"할 것을 강조

○ **北, 노동당 창당일 맞아 사상교육 주력(10/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노동당 창당 63주년(10.10)을 맞아 당조직의 주관 아래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대성 교양'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화, 조선중앙방송은 7일 "당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각지 당조직들에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한 위대성 교양을 활발히 벌여 그 실효를 높이고 있다"며 우상도서에 대한 독보(讀報)와 연구발표 모임, 사적관 참관 사업 등을 예시함.
- 또 당창건 사적관, 조선혁명박물관, 김일성종합대학 혁명사적관을 비롯해 김일성 부자가 시찰한 단위도 집단으로 참관 진행

○ **北, 신임 철도상에 전길수씨(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의 김용삼 철도상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후임에 이 부처 참모장인 전길수씨가 기용된 것으로 확인, 조선중앙통신은 10월 4일 라진-하산 철도 및 라진항 개건 착공식을 전하는 가운데 이 행사에 참석한 전씨를 철도상이라고 언급, 이 같은 사실을 확인
  * 전길수 철도상은 수송지휘국 1부국장, 수송지휘국장, 참모장 등을 지냄.

다. 경제 관련

○ **北 노동당창당 기념사설, 경제 총공격전 독려(10/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노동당 창당 63주년(10.10)을 맞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총공격전을 벌여 당이 제시한 경제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빛나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이날 '일심단결의 기치 높이 전진하는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이룩되고 있고 정권수립 60주년(9.9)을 계기로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진격의 돌파구가 열렸다"면서 이같이 촉구
- 신문은 특히 "강성대국의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갖고 드세찬 공격전을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야 한다"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 사업을 적극 다그치며 천리마 대고조 시기처럼 내부예비(유휴자재)를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전 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주문

○ **北, 비료·비닐 적게 쓰는 종자 개량 주력(10/10, 조선중앙방송)**

- 농자재 부족으로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영농관련 연구.교육기관들이 비료나 모내기용 비닐을 적게 쓰면서도 소출을 높일 수 있는 종자개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0일 보도.

- 방송은 농업과학원 산하 벼연구소, 작물재배연구소, 농업기계화연구소와 농업과학분원들에서는 "불리한 자연조건에 대한 견딤성이 강하고 적은 비료를 가지고도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벼 품종을 확대 도입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가고 있다"고 보도

4년연속 풍수해 北들녘 오랜만에 '풍년' 기대(10/8, 연합)

- 2004년부터 작년까지 4연 연속 각종 풍수해에 시달린 북한이 올해 여름과 초가을은 '무사히' 넘김으로써 만성적인 식량난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 지난달 방북했던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관계자로부터 "올해는 대풍"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함.
- 북한 매체들은 올해 작황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 당국이 연일 노동당 조직을 "총동원"해 "가을걷이 전투"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임.

유럽기업인투자단, 北과 IT사업 여러건 계약(10/8,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방북한 유럽과 중국기업 투자단이 북한측과 상담을 통해 휴대전화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투자단을 인솔한 네덜란드 정보기술자문회사인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가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치아 대표는 "이번 산업시찰 이후 벌써부터 (북한과) 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이 있다. 유럽기업들이 북한의 정보기술(IT)분야에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며 "곧 여러 개의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
- RFA는 이번에 방북한 스페인과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 기업들은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양에서 투자 상담을 벌였다고 설명

北, 강성대국건설 동원에 '태천의 기상' 강조(10/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초 "선군시대의 새로운 투쟁정신"이라고 제시했던 '태천의 기상'을 발휘해 '강성대국'을 실현할 것을 주민들에게 강력히 촉구
- 신문은 '창조하라, 공화국의 번영을 위하여'라는 장문의 '정론'을 통해 "'태천의 기상'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창조정신"이라며 '태천의 기상'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 '태천의 기상'이란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1월 하순 새로 건설된 평안북도 태천4호발전소를 시찰한 자리에서 청년 돌격대원들이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했다며 그 '투쟁정신'을 명명한 것으로, 그 이후 북한 매체들은 "태천의 기상은 조선의 기상"이라고 주장
- 신문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려고 내세웠던 '강계정신'이 "사회주의 수호정신"이었다면 '태천의 기상'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창조정신, 제 힘으로 자기식으로 창조하며 비약하는 기상,

창조를 해도 통이 크고 대담하게 모든 것을 변혁해가는 기상"이라고 선전

- 신문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의 앞장에서 용감하게 돌진하고 있는 평안북도 인민들의 백절불굴의 강행군은 장군님의 뜻을 따르는 결사옹위의 대행진, 장군님의 구상을 실천하는 결사관철의 대행진"이라며 평안북도를 "강성대국 건설의 선구자"로 규정

UNICEF, 北지원 식품서 멜라민 검출 미검출(10/7,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자신들이 북한 어린이와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땅콩 영양식품 등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7일 발표, UNICEF 뉴욕 본부의 매코맥 공보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UNICEF가 영양실조 치료제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공급한 땅콩영양식품(RUTF)에서 "현재까지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보고는 없다"며 이 식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설명
- UNICEF는 올 상반기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개선사업의 하나로 함경북도와 량강도 지역의 5살 미만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약 8천900명에게 땅콩영양식품을 제공했으며 6-11살 초등학교 어린이와 임산모 수만명에게 각각 영양과자와 영양보충제를 공급
- 매코맥 공보관은 "UNICEF가 국제적으로 모유수유 권장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분유를 직접 공급한 실적은 없다"고 말하고 "다만 북한에 공급되는 영양식품의 재료가운데 일부가 중국산 유제품일 가능성을 고려해 앞으로 북한에 공급되는 영양식품에 대해 더욱 철저한 식품안전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 UNICEF에 따르면 북한에서 6개월 미만 영아들에 대한 모유 수유율은 2006년 기준 약 65%로 주변국들에 비하면 높지만, 전체 산모의 3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빈혈을 앓고 있어 모유를 먹은 영아들이라고 해도 영양실조와 저체중 등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 매코맥 공보관은 "북한 어린이들의 높은 영양실조율과 저체중율, 그리고 개선되지 않는 임산모들의 영양상태, 식수사업과 교육 등을 위해 올해 1천5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6일 현재까지 3분의 1수준인 500만달러가 걷혀 북한 어린이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RFA는 보도

北외채 180억달러…GDP 육박(10/6, 연합)

- 북한의 외채 규모가 180억달러에 달한다는 추정이 제기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은 7일 정보당국으로부터 파악한 결과, 북한의 대외채무 규모는 러시아, 중국 등 30여개국에 180억달러(달러당 1천200원 기준환산시 21조6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언급
- 이는 작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24조7천억원과 맞먹는 수준이

며 이 중 한국의 대북 차관은 1조1천9억원으로, 북한 외채의 5%에 해당

○ **北, '휴대용 노래반주기' 제작(10/6, 조선신보)**
- 북한의 음향기기 생산업체인 메아리회사(전 메아리음향사)는 TV수상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화면과 반주를 즐길 수 있는 휴대용 노래반주기를 제작했다고 조선신보가 6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무선 마이크 중간에 숫자 버튼이 붙은 모양의 '마이크식 화면자료 반주기'에는 1천500여 곡의 화면반주 음악이 저장돼 있으며 노래에 대한 점수 평가, 녹음에 의한 2중창 등의 기능도 갖춰져 있음.

○ **北예술단, 생산현장 경제선동 강화(10/6, 노동신문)**
- 북한은 중앙예술단체는 물론 각 지역의 모든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들을 주요 산업시설에 파견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경제선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 이 신문 9월29일자는 '경제선동의 북소리 높이 총공격전을 힘있게 추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예술선전.선동대를 통해 "총 3만 832개 단위에서 11만 7천315회에 걸쳐 1천31만 5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선동이 진행됐다"고 언급

라. 군사 관련

○ **北, 9월 서해상서 사격·對地공격훈련 실시(9/12, 연합)**
-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연이어 '위기지수'를 높이고 있어 군당국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북한은 9월 중순과 하순 백령도 위쪽의 장산곶 근해에서 경비정의 실사격훈련과 가상 대지(對地) 공격훈련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이들 훈련에는 서해 초도 등에 전개된 서해함대사령부 소속 8전대의 경비정 수척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이들 훈련에 이어 10월 7일에는 서해 상공에서 공대함 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으며 9일에는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함정이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됐다"고 주장
- 이와 함께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횟수도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7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北해군사령부, 서해 무력충돌 경고(10/9,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9일 우리 해군이 북한 영해를 잇따라 침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수역에서 "해상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됐다"고 말하고 "우리(북한)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북한 해군사령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군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NLL 고수책동"으로 인해 "서해상에서는 언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의 불찌가 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은 아무런 법적 기초도 우리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만들려는 남조선 괴뢰군당국의 처사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해군, 南함정 서해 NLL 넘은적 없다(10/9, 연합)

- 해군 관계자는 9일 우리 해군 함정이 북측 영해를 잇달아 침범하고 있다는 북한 해군사령부의 주장과 관련, "남측 함정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적이 없다"고 발표, 이 관계자는 "우리 함정은 NLL 이남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감시하고 있다"면서 "NLL을 월선하거나 북측에 군사적으로 위협을 줄만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

北, 국군의 날 행사 비난(10/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10.1) 행사에 대해 "군사적 대결을 고취하는 불순한 소동"이라고 8일 비난, 신문은 '분별없는 군사적 대결 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남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는 첨예한 정세속에서" 정부가 국군의 날 행사에서 "도발적인 놀음을 요란하게 벌인 것은 스쳐지날 수 없다"고 언급
- 신문은 특히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같은 날 열린 '10·4선언' 발표 1주년 기념행사엔 불참한 채 국군의 날 행사에만 참석한 점을 들어, 국군의 날 행사의 "대결적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주장
- 이어 신문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다시 거론, "이것이 우리를 자극하고 적대감을 고취하며 나아가서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속셈)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뻔하다"고 주장

北, 소형핵탄두 개발 추진중(10/8, 연합)

- 김태영 합참의장은 8일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같이 답변한 뒤 "(북한이 현재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언급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10/8, 조선일보)

- 북한이 오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7일 오후 서해안에서 단거리 지대함(地對艦) 또는 함대함(艦對艦)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 정부의 대북 정보 소식통은 "북한군이 해군 9전대 기지가 있는 황해북도 초도에서 7일 오후 KN-01 지대함 미사일 또는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하고 발사한 미사일 발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KN-01은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최대 사정거리는 110~120㎞이고,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46~50㎞임.
- 정보 당국은 북한이 최근 초도 지역 해안에 미사일들을 가져다 놓은 데다, 서해안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선박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정부 소식통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북한 군부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北, 참여정부 기간 6천500만달러 무기 도입(10/6, 연합)

- 북한이 참여정부 5년동안 모두 6천5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해외로부터 도입한 것으로 드러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이 6일 정보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중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독일 등지로부터 연평균 1천3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류를 도입함.
-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중고 군용 차량과 군복 등 군 후방물자를 지원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 의원은 밝힘.
- 이 기간 북한은 육.해.공군 군사력을 상당부분 증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상군은 스커드 및 노동 등 각종 지대지 미사일과 장사정포, 야포 등 포병 군력 위주로 증강됐으며, 해군은 소형잠수함 및 해상경비용 소형함정 중심으로 보강됐다. 공군의 경우 기존 항공기 수리 정비를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마. 사회·문화 관련

美시판 평양소주, "인기 시들"(10/11,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4월 미국에 상륙한 북한의 평양소주가 처음엔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현재는 소주맛과 통신·통행·통관의 어려움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고 평양소주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당씨 주류도매(Tang's Liquor Wholesales)' 대표 당갑정씨가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당갑정씨는 평양소주는 주문을 해도 제때에 공급되지 않고, 특히 특별관세가 붙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 소주에 비해 원가가 한 박스당 10달러 가까이 더 비싸다고 설명, 그러나 식당측은 서민 술인 소주 값을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팔고 있어 수익을 볼 수 없음. 평양 소주는 또 좋은 술이긴 하지만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러운 한국 소주와 달리 냄새가 나서 젊은 층으로부터 독하고 쓰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당씨는 설명

北, 평양 홍보 사이트 '류경' 개설(10/11, 우리민족끼리)

- 해외동포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등을 위한 북한측 창구인 '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최근 평양을 홍보하고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류경(www.ryugyongclip.com)'을 개설
- 중국 선양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이 사이트에는 특히 남한 검찰의 '여간첩 사건'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반박한 지난달 2일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영변 핵시설의 원상복구를 경고한 9월 19일자 외무성 대변인 답변 등 북한의 기관·단체가 발표한 입장도 실려 있음.

北김일성대, 건강식품 '푸코이단' 개발(10/10,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 생물정보연구실이 최근 동해의 다시마와 미역귀 등 해초를 이용해 피를 맑게 하는 건강식품인 '푸코이단(Fucoidan)'을 개발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평양 창광종합전문식당가 산뜻하게 새단장(10/9, 연합)

- 평양시내 중심지인 창광거리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내년 4월까지 대대적인 개선공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 9일 인천시와 북한측 관계자에 따르면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는 종합전문식당가 조성을 위해 곳곳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왕복 8차선인 도로 양측을 따라 한창 진행 중임.
  * 창광거리는 1985년 건설된 15~39층짜리 고층아파트 30여개동과 각종 공공시설들이 밀집한 평양시내 최대의 도심이며 인근엔 44층인 고려호텔 등이 자리잡고 있어 내.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

발명·새기술 전람회 폐막(10/8, 조선중앙방송)

- 10월 1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된 제10차 전국 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가 8일 폐막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김용진 교육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놓은 107명에게 금메달이 수여됐다고 방송은 보도

北, 대형 대중목욕탕 '문수원' 새단장(10/8, 조선신보)

- 북한은 평양의 대표적인 대형 대중 목욕탕인 문수원을 2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보수, 정권수립 60돌(9.9)을 계기로 면모를 일신했다고 조선신보가 8일 보도

北 인구조사 순조롭게 진행(10/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10월 1일 시작된 인구주택총조사에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어 조사가 "무척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유엔인구기금(UNFPA)의 오마 가제딘 아시아 담당관이 밝힘.
- 그는 8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인구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평양 인근의 몇몇 도시에서는 텔레비전, 신문, 거리의 포스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인구조사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주민들도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
- 이번 조사에 참여한 UNFPA 요원 10명이 2명씩 총 5개조로 나뉘어 표본으로 선정된 60개 군을 방문조사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들 국제요원은 북한 요원들의 인구조사표 작성 과정을 지켜보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응답자에 대해선 직접 재조사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필요도 없을 만큼 북한 요원들의 업무 수행은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가제딘 담당관은 언급
  * 인구조사 중간결과는 오는 12월, 최종 결과는 내년 3·4분기에 나올 예정

김정일, 평양조명위해 기술자 해외연수시켜(2008년 10월호, 조국)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평양의 밤을 밝히는 주요 기념물과 거리 등의 조명을 위해 2000년 1월 1일 '평양시 조명사업'을 지시하면서 '없는 살림'에 조명 기술자들을 외국에 연수도 보낸 것으로 알려짐.
- 월간지는 김일성광장과 만수대의사당, 주체사상탑 등 주요 건물과 거리, 광장의 조명을 2007년 10월 설립된 '불장식연구센터'가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北, 영변 핵시설에 IAEA 검증팀 접근 차단(10/9, 연합; 로이터 통신)

- 북한 당국이 9일 모든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검증팀 활동에 정통한 외교관이 주장, 이 외교관은 검증팀이 북한당국으로부터 이날부터 영변의 모든 핵시

설에 접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언급, 검증팀은 현재 영변의 숙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 북한은 2주 전인 9월 24일 IAEA 검증팀이 영변의 재처리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재처리시설의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나 그 외 시설에 대해선 검증팀의 접근이나 활동을 허용해왔음.

나. 북·미 관계

○ 美, 北 테러지원국서 해제(10/12, 연합)

- 미국 국무부는 11일 (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며, 이에 따라 북한은 핵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발표,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발표
- 이번 합의는 북한이 과거에 추출했던 플루토늄 양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및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한 검증도 포함됐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방문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음. 다만 북한의 미신고 핵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하에 검증이 이뤄지도록 함.
- 이와 함께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의 검증과정 참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지원역할이행, 시료(샘플)채취 및 과학적 입증활동 보장 등이 검증패키지에 포함
- 이번 합의는 지난주 사흘간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은 것임.
- 매코맥 대변인은 그간 미국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일본측과도 밀도있는 협의를 가졌고, 일본 정부도 테러지원국 해제에 동의했다고 언급
- 또 매코맥 대변인은 북미 합의사항을 6자회담에서 공식화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혀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

  *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년 9개월만에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벗게 되었음.

○ 北, 美대선은 "돈 뿌리기 경쟁" 매도(9/25,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돈 뿌리기 경쟁"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부패'를 집중 부각, '딸라(달러)에 의해 좌우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전'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내달 치러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열기 띤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경쟁이란 누가 선거자금을 더 많이 긁어모아 돈주머니를 불룩하게 채우는가 하는 경쟁"이라고 주장

다. 북·중 관계

○ 北·中, 철도화차 반환 놓고 해묵은 갈등 재연(10/6, 연합)

- 북중 양국이 국경을 오가며 물자수송에 사용되는 철도화차 반환문제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대북소식통은 6일 "중국이 올해 7월부터 북한의 화차가 들어와 물자를 싣고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국경 통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중 철도당국이 앞으로 열릴 국경철도회의에서 화차반환 등 철도합의 개정을 놓고 논의를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언
- 중국 선양(瀋陽)의 한 대북무역업자도 "중국에서 북한 화차에만 물건을 실어 내보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이후 북한으로 물자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철도화물 수송에서 중국의 민간회사 소유화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북한에서 화차를 돌려받지 못한 중국 기업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
- 북중 양국은 1959년 체결, 1973년에 개정한 북중철도협정과 매년 10월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는 정례 국경철로회의 의정서를 통해 베이징(北京)-평양 국제열차운행과 양국간 철도화물 수송을 뒷받침하고 있음.
- 양국은 매년 10월 국경철로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전년 7월1일부터 당해 6월30일까지 양국에 남아 있는 자국 철도화차 숫자를 확정, 의정서에 기록함. 2001년 6월30일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중국 화차는 무려 1천933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작년 7월에는 북한의 철도화차 미반환을 이유로 중국이 화물수송에 난색을 표명,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원조가 차질을 빚기도 했었음.
- 중국은 북한의 철도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그간 대북원조 형식으로 북한에 디젤기관차 및 화차를 지원해왔음. 중국 단둥의 한 대북소식통은 "중국이 올해 7월 북한 화차로만 화물을 수송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대신 북한에 화차 1천대를 지원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최근 단둥에 들어오는 북한 화차들이 신형 유개화차로 바뀐 점으로 미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라. 북·러 관계

○ 北박의춘 외무상, 15일 러시아 방문(10/10, 리아노보스티 통신)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10월 15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10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러시아 외교 소식통을 인용·보도, 이 소식통은 "박 외상이 1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

- 이번 회담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와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연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

北주재 '러'대사관, 북·러 수교60돌 연회 개최(10/10, 평양방송)

-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9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러 수교 60주년(10.12)을 앞두고 북한 내각 고위인물들을 초청, 연회를 열고 친선관계 증진을 강조했다고 평양방송이 10일 보도
- 연회에는 북측에서 박의춘 외무상과 궁석웅 외무성 부상, 김 철 철도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등이 참석

北철도상, 아시아·유럽 국제수송로에 중요한 고리(10/9, 조선신보)

- 북한의 전길수 신임 철도상은 북한과 러시아가 라진-하산 철도 및 라진항의 개선 공사에 실제 착수한 것을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계속 심화"돼온 양자간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서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
- 그는 특히 54㎞에 달하는 라진-하산간 철도구간의 개선은 길지 않은 노선이지만 북한과 러시아간 육상수송로를 새로 정비하는 것을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대륙간 수송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국제수송 통로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고 언급
- 라진항 개선공사는 라진항 3개부두가운데 제3부두에서 낡은 설비들을 제거하고 크레인 등 새 설비를 설치하며 부두를 확장.보강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당면하여 1단계 공사는 2010년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언급

마. 북·일 관계

日, 北, 美테러지원국 명단서 제외는 시기상조(10/10, 연합)

-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조치는 북핵 검증작업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이 10일 주장
-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즉각 제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이와 관련해 일본과 좀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北, 日 무력증강에 "국방력 강화"로 답할 것(10/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8일 일본의 잇따른 요격미사일 실험 계획은 "미사일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해 재침의 포성을 열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일본의 "무력증강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합동훈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 및 항구법 개정 움직임 등을 거론하고 “선제타격 권리는 일본에만 있지 않다”고 주장

바. 기타외교 관계

北종교인대표단, 필리핀 향발(10/11, 조선중앙통신)

- 장재언 회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의 종교인협의회대표단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종교평화대회 제7차 종회 참석차 11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이집트軍 친선 외교(10/7, 조선중앙통신)

- 아흐메드 아보 세리 아우프 모하메드 북한 주재 이집트 대사관 무관이 이집트 ‘군대절’(군 창설일)에 즈음해 7일 평양시내 대동강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연회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군 장성 및 장교들, 북한 주재 각국 외교 대표와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됐으며, 이스마일 압둘라흐만 고네임 후세인 북한 주재 이집트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

탈북경로 동남아국들과 공안협력(10/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주상성 인민보안상과 방북중인 베트남의 레 홍 아잉 공안장관(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갖고 두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양 기관간 체결된 상호협조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베트남이 태국, 라오스 등과 함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인 점을 감안할 때, 탈북자관련 협력사항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있음.
  * 주상성 보안상은 지난 6월 베트남과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촘말리 사야손 라오스 국가 주석을 각각 면담했으며, 통반 센가폰 라오스 내무장관과는 상호 사회안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음.

3. 대남정세

남북음악인 평양서 윤이상 작품 첫 협연(10/11, 연합)

- 윤이상평화재단(이사장 박재규)은 15-17일 평양 윤이상음악당에서 열리는 제 27차 ‘윤이상 음악회’에 남측 첼리스트인 고봉인 씨가 참가해 평양 윤이상관현악단과 협연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 남북 음

악인이 한 무대에서 윤이상(1917-1995)의 작품을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윤이상평화재단은 설명

통일부, 비핵화 진전시 대북사업 조정될 것(10/10, 통일부)

- 통일부는 10일 북한 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비핵·개방·3000' 구상에 따라 각종 대북 사업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미간 핵검증 협상이 타결되면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나는 질문에 정부가 '비핵·개방·3000' 구상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뒤 "핵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각 분야 사업들이 검토가 되고 우리가 천명한 입장에 맞춰서 조정돼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언급

내년 남북기금에 쌀 40만·t비료 30만t 반영(10/9, 통일부)

-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에서 북한에 현 시세를 기준으로 쌀 40만t, 비료 30만t을 각각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반영했다고 통일부가 9일 발표
- 정부가 마련한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에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쌀 지원 예산 3천520억원, 비료지원 예산 2천917억원을 각각 편성
  *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대북 지원 규모와 같은 양이지만 쌀·비료의 국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액수 기준으로는 쌀 50만t, 비료 40만t을 반영했던 올해 예산(3천485억원) 보다 46% 늘어났음.
- 반면 대북 경협사업 예산은 북핵진전.경제적 타당성.재정부담 능력.국민적 합의 등 이른바 '경협 4원칙'을 적용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의 6천101억원에서 약 51% 감소한 3천6억원이 편성, 그러나 개성공단 2단계 조성을 포함한 10·4 선언(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비용과 개성공단 숙소 건설비용 등은 이번 협력기금 사용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음.
- 다만 남북간 관련 논의가 진행돼 사용 수요가 생길 경우 예비비 형식으로 책정한 여유자금 2천530억원을 사용한다는 복안이라고 통일부는 보도
-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내실있게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2차) 착공(109억원) 및 소방서 건립(57억원) 비용을 반영하고 교역 및 경협자금 대출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352억원으로 증액
- 이런 조정을 거쳐 도출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5천86억원으로 올해 당초 사용계획에 반영된 1조3천887억원에 비해 8.6% 증가

평양에 현대식 치과병동 첫 준공(10/9, 연합)

- 인천시와 우리겨레하나되기(이하 우리겨레) 인천운동본부 등이 협력해 현대화 사업을 마친 평양 제1인민병원 부설 치과병동이 10월 7일 준공식을 개최
- 이 치과병동은 우리겨레 인천운동본부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지난해 체결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현대화사업이 추진됐음. 인천시는 총 1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1억원 가량의 건축자재와 2억원 규모의 의료장비 등 모두 3억원을 지원했으며 우리겨레 인천운동본부가 7억원을 부담
- 시와 우리겨레 대표단 79명은 지난 6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치과병동 준공식에 참석하고 나서 8일 귀국

통일부, 개성공단 40대 근로자 증가추세(10/8, 통일부)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공단 입주기업들의 근로자 고용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한 뒤 “4월 이후에 20~30대 근로자의 증가는 정체되고 있지만 40대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4월 말 13.7%였던 40대 근로자 비율이 8월 말 기준으로 16.5%로 증가했다”고 소개
- 이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20~30대 여성을 개성 시내에서 더 이상 데려오기가 어려워지고 작년 남북이 합의한 숙소 건설도 진척이 없음에 따라 공단 업체들이 대응책 차원에서 근로자 연령대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통일부는 8월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 생산직 근로자 3만3천여명 중 여성 비율이 약 86%이며, 연령별로는 20~30대의 비율이 80%를 상회한다고 발표

金통일, 연내 대북 식량지원 노력 중(10/6, 통일부)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6일 연내 대북 식량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언급,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 시기를 묻는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내부적으로 관계부처간에 협의 중인데, 시간의 문제이며 꼭 지원할 것”이라고 답한 뒤 “올해 안에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
- 김 장관은 또 “정부는 북의 요청이 없더라도 식량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방법·규모·시기를 검토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적절한 계기에 대북 식량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

통일부, 대북 전단살포 자제 요청(10/8, 통일부)

- 통일부는 최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중지를 요구한 민간단체의 대북 선전물(삐라) 살포 문제와 관련, 8일 “관련 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힘.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부는 2004년 6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는 입장 하에서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

金통일, 기념행사 불참불구 10·4입장 불변(10/6, 통일부)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0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산물인 10·4선언 채택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10·4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6일 밝힘.

별첨: 美-북한, 핵검증 합의 全文(10/11, 미국무부)

미국 국무부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를 발표하면서 그간의 협의진행 상황과 핵검증에 관한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국무부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성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수단의 중요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올해 7월 만나 검증수단에 관해 협의하고 당사국들간에 문서 초안을 교환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7월12일 검증방안에는 북한내 시설방문과 문서검토, 기술진을 상대로 한 인터뷰, 6자회담 당사국들간에 만장일치로 합의된 여타 방안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언론발표문을 내놓았다.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을 대표해 미국의 협상팀이 10월1-3일 평양을 방문, 검증방안에 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의를 토대로 미국과 북한 협상팀은 중요한 검증수단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6자회담 당사국의 전문가들이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검증에 중요한 자문과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한다.
-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 검증체계에 포함된 모든 조치들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된다. 여기에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감시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이러한 검증수단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합의는 양국간 공동 문서와 여타 약정으로 성문화됐으며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재확인됐다.

합의내용과 부수된 양해사항은 여타 당사국들에게도 전달됐다.

검증수단들은 가까운 미래에 6자회담 당사국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채택될 검증의정서의 기준선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이 6월26일 제출한 핵신고서의 검증은 5월8일 제출된 영변 핵시설의 가동기록에 관한 1만8천쪽이 넘는 문서의 검토작업과 함께 이미 시작됐다."

◎ 북한연구실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성 김 "中 이르면 이달중 6자회담 소집"(10/12)

- 성 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간에 이뤄진 북핵 검증합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6자회담이 이달 중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음. 성 김 특사는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6자회담 개최를) 얘기해 왔고, 중국측은 검증 패키지를 채택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그것도 이달안에 회의를 소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성 김 특사는 이번 6자회담이 열린다면 회담에는 장관급이 아닌 수석대표들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만일 북한이 핵검증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이번 북미간 합의를 6자회담 의정서에 담는 다음번 수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 또 그는 "북한이 검증활동에 협력하는 것은 의무이며, 우리는 그들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있다"고 말했음. 성 김 특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임한 폴라 드서터 국무부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는 북한에서 핵물질 규명을 위한 시료(샘플)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북한은 반출하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시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기 위해 미국 또는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음.

○ 김숙 "환영..조만간 6자회담 개최기대"(10/12)

-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북.미 간 검증체계 협상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 "정부는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궁극적으로 북핵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라고 말했음.
-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음. 그는 북한의 불능화 중단 조치 등에 대해 "미국측 발표와 함께 북한도 즉각 불능화 조치로 복귀한다고 미국 측에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즉각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음.
- 김 본부장은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돼 검증의정서를 확정짓고 앞으로 6자 차원에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또 6자회담을 통해 2단계 비핵화 마무리 및 3단계 진입을 위한 논의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음. 그는 이번에 북.미 간에 합의된 검증의정서가 3쪽 분량이라고 소개했음.

- 김 본부장은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을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여태까지 국제적으로 실시됐던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제사찰이 아닌 이상 사찰대상국의 협조가 필요하게 돼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이라고 설명했음. 그는 또 실제 검증활동 과정에서 난관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의 협조 수준에 달려있으며 북한이 진전성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북한의 진정한 협조를 얻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음.

"北에 2차 핵실험 조짐"<abc>(10/10)

- 북한에서 2차 핵실험 조짐으로 보이는 활동들이 포착됐다고 미국 abc뉴스가 9일 보도. abc는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최근 2주동안의 북한 위성사진 판독 결과 핵실험장으로 의심되는 장소에서 터널 굴착이나 대형 케이블 이동 같은 의심스러운 활동들이 감지됐다고 전했음. 이런 활동들은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 전에도 감지됐던 행동들임.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북한이 영변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 검증단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음.

"美, 北검증안 수용 원칙적 합의"<FT>(10/10)

-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내놓은 핵 검증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현재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일본의 입장이 변수가 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최근 방북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통해 북한이 전달한 핵 검증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전했음.
- 신문은 이번 합의에 대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요청하기에 앞서 6자회담 참가국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특히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음.
-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부시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부 내에서는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4개국이 '이 정도면 괜찮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면 이번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음.

北, 영변 핵시설에 IAEA 검증팀 접근 차단(10/9)

- 북한 당국이 9일 모든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검증팀 활동에 정통한 외교관이 밝혔음.

이 외교관은 검증팀이 북한당국으로부터 이날부터 영변의 모든 핵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음. 검증팀은 현재 영변의 숙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IAEA는 이날 안에 북측의 조치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밝혔음. 북한은 2주 전인 지난달 24일 IAEA 검증팀이 영변의 재처리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재처리시설의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나 그 외 시설에 대해선 검증팀의 접근이나 활동을 허용해왔음.

○ **라이스 "北, 핵검증 기준 충족시켜야"(10/9)**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8일 북한의 핵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문제와 관련, 북한은 핵폐기를 검증하기 위한 적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음. 라이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방북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측과 검증문제 타협안에 합의했는 지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검증의정서가 우리 기준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밝혔음.

○ **美국무부 "성 김 방북않고 귀국"(10/7)**

- 미 국무부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6일 "성 김 북핵 특사가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으나,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8일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우드 부대변인은 "성 김 특사는 한국, 일본측과 추가 협의를 계속하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또 그는 라이스 장관이 방북결과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브리핑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방북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라이스 장관의 보고는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음. 우드 부대변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주 축구경기 관람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는 보도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김정일)가 지쳐있다는 보도를 듣긴 했다"고 답했음.

나. 미·북 관계

○ **"美, 北 2차 핵실험 우려해 해제"<WP>(10/12)**

-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준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2일 보도.
-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미 국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종료까지 100일을 남긴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결정에 작용했다."라고 전했음.

- 신문은 북한이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막판 협상에서 미신고 시설에 대해 잠정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검증전문가들이 핵관련 시설주변의 샘플(시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양보'했다고 밝혔음. 또한 북한은 한국과 일본이 검증과정에 참여하는 것에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구두합의' 형식으로 이뤄진 북한의 양보내용에 추상적인 표현이 담겨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서명하기 전까지 표현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 北외무성 "불능화대상 핵시설 검증에 협력"(10/12)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미국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영변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를 재개하며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성원들의 임무 수행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는 미국이 10.3합의에서 공약한 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킨 데 이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의무를 이행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음. 그는 "앞으로 10.3합의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조치가 실제적 효력을 발생하며 (6자회담 참여) 5자가 경제보상을 완료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음.

○ <테러지원국 해제> 美전문가 "긍정적이지만 최종판단 일러"(10/12)

- 미국 국무부가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음.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악은 세부 합의사항에 있었다"며 "앞으로 많은 부분을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미국관리들이 검증을 요구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국무부도 검증조치가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관련 핵프로그램과 북한의 핵확산 활동까지 포함한다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지금 처음 드러난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음.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태도 변화가 놀라운 급선회이고 지난주 남한 해군에 대한 군사행동과 함께 미사일과 핵실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무자비한 성명을 발표했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남는다고 지적했음.

○ 평양국제영화제 상세 소개<LA타임스>(10/12)

- 미국의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1일 북한에서 지난달 열린 평양국제영화축전을 소개하는 장문의 기사를 1면과 6면에 실어

눈길을 끌었음. 이 신문은 폐쇄된 사회로 알려진 북한이 1987년부터 2년 마다 평양국제영화축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문을 연다면서 이 영화제에는 인기 영화배우나 파파라치는 없지만 열정적인 관객들이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라고 소개했음.

- 올해는 중국과 러시아, 독일, 스웨덴, 영국, 이집트, 이란 등 세계 46개국에서 110편의 영화가 출품됐으며, 대부분 영화들이 확실하게 선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가치와 충절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음.
- 2004년부터 세번째로 이 영화제에 참가한 스웨덴 프로듀서 헨릭 뉴크비스트는 영화 관련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이 영화제에 영화 제작자들이 참가하는 것은 관객들의 열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그는 "관객들의 감정 표현이 아주 솔직하고 자연스럽다"면서 "그들은 유럽 관객과는 달리 영화의 결말을 예상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주 신선하다"고 말했음. 영화제 관람권은 대체로 작업장과 대학, 노동당을 통해 배포되지만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되고 있음.

<테러지원국 해제> "美 양보불구 난관 예상"<NYT>(10/12)

-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인터넷판에서 미국이 북한과 핵 검증 방식에 합의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키로 발표한 것을 전하면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신고된 모든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한 이번 협상은 거의 파국 위기에까지 이르렀던 북핵 협상을 살려내는 것이자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 중 하나를 구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이번 북미간의 협상은 북한이 다른 핵무기 시설을 숨기고 있다고 국제 전문가들이 의심을 할 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의심시설 검증이라는 가장 민감한 문제에서는 한발짝 뺐음. 이번 합의는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음.
- 이에 따라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미 정부의 양보가 불가피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양보가 앞으로도 난관을 가져올 것이 확실할 것으로 보고 있음. 북한이 검증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 게리 세이모어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이번 협상을 미 정부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과 모호한 협상을 한 점 때문에 북핵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시절이 또 올 것이라고 경고했음. 그는 핵 의심시설 접근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검증 전문가들이 핵물질 관련 시료를 북한 외부의 시설로 반출해 검증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문제도 미국과 북한 측이 얼버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역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음.
-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 대사는 부시 행정부가 가장 곤란한 이슈들

을 '차버렸다'면서 "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번 협상은 북한의 확실한 승리라고 평가했음.

<테러지원국 해제> 오바마 "北, 테러지원국 해제 적절"(10/12)

-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11일 북한이 핵검증조치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데 대해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음.
- 오바마는 이날 미 국무부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검증조치에 합의한 것은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로 나아가는 사려깊은 조치"라면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데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다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결정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밝혔음.
- 오바마는 또 "이제 북한이 핵시설을 복원하려던 노력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돌려놓으며, 영변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고 북한의 핵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체제를 이행하는 데 국제사회와 완전협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음. 그는 특히 "만약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최근에 철회한 제재를 다시 가하며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앞서 존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전인 10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 6월26일 제출한 핵신고 내역을 완전히 검증할 수 없다면 대북제재완화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매케인은 "최근 (북미간) 검증합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혀 북핵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음.
- 매케인 후보는 "북핵 검증체제에 대한 최근의 합의가 북미간에 합의되고 나서 아시아 동맹국들과는 그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논의된 정도라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했음. 그는 "우리는 이런 외교활동을 벌이면서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검증문제를 남겨두고 합의를 위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테러지원국 해제> 美보수파 일각 반발.."나쁜 행동에 보상"(10/12)

-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는 미국 내 일부 보수파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AP통신은 이번 조치는 "부시 대통령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지부진했던 북핵협상을 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하고, 이는 일부 보수층의 즉각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

-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하는 것이며 미국의 다른 적성국, 특히 이란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음. 이에 대해 미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핵 검증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음.
- 보수진영은 또 이번 조치는 북한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북한 핵확산 및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혹은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존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테레지원국 해제조치에 앞서 10일 저녁 성명을 내고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찰을 수용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음. 매케인 후보는 "행정부가 이번 새로운 검증체계 합의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어떻게 증진시키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테러지원국 해제> "北 테러해제해도 핵포기 '회의적'"<美전문가> (10/12)

-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에도 핵무기 보유 정책을 가까운 장래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혔음.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중인 스트로브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폭발장치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한 이상 핵무기 보유 야망을 조기에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음. 스트로브는 "지배 체제의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상태에 직면해 있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 보유 프로그램이 미국이나 중국 등 외세의 압력에 대항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음.
- 그는 "북한 내부적으론 핵무기 프로그램이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리더십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음.

<테러지원국 해제> 美, 北지정후 20년9개월만에 해제(10/12)

- 미 국무부는 북한을 1987년 12월 김현희 등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그리고 국무부는 지난 4월30일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이라고 발표.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조치에서 벗어나려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그동안 수없이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해제 가능성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음.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급거 북한을 방문해 핵

검증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우여곡절 거친 끝에 예상됐던 해제 일보다 꼭 2개월이 지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지게 됐음.

美, 北 테러지원국서 해제(10/12)

- 미국 국무부는 11일 (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음.
-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밝혔음. 이번 합의는 지난주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 힐 차관보가 방북기간 이끌어낸 합의사항은 전문가들에 의한 핵물질 관련 시료(샘플) 채취, 북한의 신고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양자간 상호동의 하에 검증을 실시한다는 내용인 알려졌음. 북한이 자신들의 핵확산 및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혔는지를 검증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음.
- 매코맥 대변인은 그간 미국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일본측과도 밀도있는 협의를 가졌고, 일본 정부도 테러지원국 해제에 동의했다고 말했음.
- 또 국무부의 이번 발표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재가동 움직임을 중단하고 핵불능화로 복귀하게 되며,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영변 시설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곧바로 추진하게 됨. 미국은 지난 8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있는 행정재량을 확보했으나,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검증 체계구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간 해제조치를 유보해 왔음.

문타폰 인권보고관 "北 식량난에 인권상황 악화"(10/11)

-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내주 유엔총회에서 식량난으로 인해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춘 북한인권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음. 문타폰 보고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지난 9일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보고서에선 특히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주목했다"며 "설사병을 앓는 북한 어린이들의 수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식량난으로 어린이, 산모, 수유모, 노인 등 취약계층이 고통당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보도.
- 그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제3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은 북한 당국이 탈북 난민들에

대해 예년에 비해 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식량난이 여러가지 인권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설명. 그는 북한이 아직 자신의 방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북한과 건설적으로 교류할 의향이 많다"며 "북한에 직접 가게 되면 북한쪽 입장도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이득일 것"이라고 말했음.

"부시, 힐 방북협상안 거부"<美폭스뉴스>(10/11)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주 방북, 핵검증 체계와 관련해 북한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안을 거부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0일 보도.
- 폭스뉴스는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가 수요일(미국시간 8일) 협상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음. 폴라 드서터 국무부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는 "대통령이 (북핵) 프로세스를 지속하기 위해 검증문제를 훼손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음. 또 드서터 차관보는 "검증담당 부서가 힐 차관보의 협상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어떤 모임에도 포함되지 못한 것을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음.

美국무부 "北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안돼"(10/11)

- 미 국무부는 1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음.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하루 전이나,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검증의정서와 검증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우리가 도달했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의무사항을 충족하면 우리도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北, 사찰단 핵시설 접근차단은 對美 압박용"<NYT>(10/10)

- 미국과 북한의 핵 검증 관련 협상이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미 정부 관리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9일 핵 사찰단의 영변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 것은 북측이 대미 압박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 이 신문은 북측의 핵 사찰단 접근 차단은 미국측의 엄격한 핵 검증 요구를 완화시키기 위해 북측이 취한 가장 최근의 조치라며 이 같이 전했음.
- NYT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협상에 정통한 행정부 관리들은 현재 북한이 핵 사찰단에게 어느 정도의 검증 재량과 핵 물질 샘플 수거를 보장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

"북핵검증 조치 취하면 테러지원국 해제 준비돼 있다"(10/10)

- 캐슬린 스티븐슨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북한이 투명한 핵문제 검증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스티븐슨 대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미국이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발언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됨. 또 그는 주한 미국대사로서 한미군사동맹을 발전시켜 분쟁지역 등 세계 곳곳에서 정책협력을 이루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음.

라이스 "북한 상황 며칠간 지켜보자"(10/10)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서해상 무력충돌을 경고하고 영변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의 접근을 차단한 것과 관련, "앞으로 며칠간 (북한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음. 라이스 장관은 이날 마리스 리엑스틴스 라트비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을 검토중이며, 동료와 얘기를 하고 있다. 발표할 게 있을 때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음.

美국무부 "北 긴장높이는 행동 중단해야"(10/10)

- 미 국무부는 9일 북한이 서해상의 무력충돌을 한국측에 경고하고 나선데 대해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미사일 실험발사의 경우에는 내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유엔안보리 1718 결의에 의해 미사일 관련활동이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추가 미사일 발사중지를 요구했음.
-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영변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의 접근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조치이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며 원상회복 조치를 강조했음. 그는 "북한은 지난 한달 넘게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고 부정적인 조치를 취해왔지만, 그런 모든 조치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불능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음.

"힐 방북결과 보고 때 분위기 좋았다"<RFA>(10/9)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결과를 보고했으며,

그 "분위기도 좋았다"고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했음.

- 이 고위 관리는 북한이 미국에 제의했다는 관측이 있는 북미간 고위급 군사회담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로선 아무 것도 말해줄 게 없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라이스 장관이 행정부내 고위 관리들과 잇따른 협의를 가졌고, 현재도 (방북 결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음. RFA는 라이스 장관이 8일 기자들과 만나 검증문제와 관련, 모종의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 그 대응책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워싱턴 외교가에선 영변 핵폐기물 시설과 북미 군사회담을 연계하려는 북측의 요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음.

페리 "北, 자제해야 美새정부와 협상 재개 가능"(10/9)

-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이 실제로 플루토늄이 재생산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미국의 차기 정권과의 협상을 아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
- 페리 전 장관은 워싱턴 아메리칸대학에서 지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북한이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자제하고 "미국의 차기 정권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면 "미국(의 새 정권)측으로부터 긍정적인 접촉이 있을 것이고, 다시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美의원 "탈북자 美정착 도움줘야"(10/9)

- 일리아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의원은 8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데 대해 "이를 계기로 국무부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음. 이 법안의 발의자인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효됐던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5만명의 난민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으나, 북한출신은 7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음.
-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독재적인 정권에 의해 통치되고 있어 장기간 고통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물품과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그는 "북한은 오로지 은둔중인 지도자의 생존만을 최고의 가치로 받들며, 책임있는 국가들의 일원으로 동참하라는 요구를 거듭 무시해 왔다"고 주장.

美국무부 "北 미사일 발사 확인 못해줘"(10/9)

-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만 일반적인 코멘트를 한다면, 우리는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역내 긴장해소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음.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핵협상을 겨냥한 대미 압박용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런 질문은 북한의 생각과 정신세계에 관련된 것인 만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음.

- 그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결과를 브리핑했느냐는 질문과 관련, "라이스 장관이 미국 정부와 협의했다. 대통령도 정부의 일부"라고 밝혀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음을 시사했음.

○ **"北, 美에 군사·정치적 해결책 제시 가능성"<조선신보>(10/6)**

- 북한은 핵검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핵문제의 현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대범하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부시 미 행정부가 "적극 호응한다면 상황 타개의 돌파구가 열려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크게 호전될 수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주장했음.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문은 '부시 정권에 제공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이번에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도를 전하고 이와 관련한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하고 그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조선(북한)이 6자구도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음.
- 신문은 '대범하고 획기적인 해결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핵신고검증 문제는 "단순한 기술실무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북미 대립은 "핵문제가 본질적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조미(북미)가 적대관계 청산의 이정표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음. 특히 북한으로선 "미국의 정책전환에 대한 아무런 담보없이 속수무책으로 '후임자'의 등장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조선은 현존 핵계획을 6자회담 합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핵억제력' 강화의 조건을 갖추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음.

다. 중·북 관계

○ **<테러지원국 해제> 中 언론 깊은 관심(10/12)**

-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키로 발표했다'는 제목의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내용을 자세하게 보도. 통신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대신 북한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진행하고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 대해 전문가들의 방문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음.

- 통신은 지난 6월 26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미국은 핵 신고서의 검증이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이라면서 해제를 미뤄오다 이달 1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덧붙였음.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관영 중앙(CC)TV의 보도를 인용,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보도. 통신은 숀 매코맥 대변인의 발언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전했음.

<테러지원국 해제> 中 환영.."비핵화 장애물 넘어섰다"(10/12)

-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섰다면서 적극 환영했음.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어떤 난관에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6자회담을 동북아안보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
-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도 국내 강경파의 압력에 못이겨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으며 북한도 핵불능화를 중단하고 원상복구에 나섰음. 북.미 양국이 검증 문제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대치국면을 보이자 중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음.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최근 "중국은 현재 각방과 협상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6자회담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테러지원국 해제> "北.美 관계개선 상징"<中전문가>(10/12)

-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의 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북·미 양국의 신뢰를 증진하고 대화와 이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난관에 봉착했던 북핵 6자회담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데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음.
- 선스순(沈世順)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했던 정책을 이젠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음. 선 연구원은 "북.미 양국의 신뢰를 증진하고 대화와 교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최근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에도 새로운 출발점이자 희망을 불어넣는 청신호"라고 평가했음.

- 류장융(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도 "이번 결정은 미국이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미 양국을 공동 인식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관계가 개선되고 6자회담이 진전되는데도 크게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 中 "北 미사일 발사 확인 불가"(10/9)

- 중국은 북한이 7일 서해 상공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역시 관련 보도를 보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음.
-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7일 서해 상공에서 처음으로 병력수송용 AN-2기를 이용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한국군 당국은 AN-2의 위협을 새롭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친 대변인은 또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 한국군 고위관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관련 보도를 보았지만 이 역시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음.

○ 北-中, 철도화차 반환 놓고 해묵은 갈등 재연(10/6)

-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대북소식통은 6일 "중국이 올해 7월부터 북한의 화차가 들어와 물자를 싣고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국경 통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중 철도당국이 앞으로 열릴 국경철도회의에서 화차반환 등 철도합의 개정을 놓고 논의를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음.
- 중국 선양(瀋陽)의 한 대북무역업자도 "중국에서 북한 화차에만 물건을 실어 내보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이후 북한으로 물자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철도화물 수송에서 중국의 민간회사 소유화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북한에서 화차를 돌려받지 못한 중국 기업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음.

라. 일·북 관계

○ 日 총리 "北 테러지원국 해제도 하나의 방법"(10/12)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12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대해 "(핵문제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하기 위해 단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나의 방법이다"며 일정한 이해를 표시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2일 보도.
- 아소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교섭 과정에서 납치 얘기가 가능하다. (북한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밝혔음.

- 아소 총리는 전날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미국이 납치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며 북한에 대해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음.

○ **<테러지원국 해제> 日정부, 납치문제 해결위해 연대 강화(10/12)**

- 일본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 대북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등 관계국과 한층 더 긴밀한 연대를 통해 북한측에 해결을 촉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음.
-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12일 미국의 해제조치로 일본의 유력한 대북 압박 수단이 사라진데 대해 "(일본 정부로서) 납치문제가 방치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 6자회담에서 확실하게 거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가와무라 장관은 그러면서 "납치문제에 관한 정책은 일보도 후퇴가 있을 수 없다. 권한을 가진 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발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며 북한이 지난 8월 중순 북일 실무자협의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음.
- 앞서 나카소네 히로부미(中曾根弘文) 외무상은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핵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한 구체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포함, 북-일 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음.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북한에 대한 양국 연대의 상징적 사안으로 여겨왔던 만큼 이번 해제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납치문제가 진전되지않은 가운데 해제는 미국 정부가 납치문제를 핵문제와 분리했음을 의미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음.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으로서는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한편 독자적인 경제제재 카드로 북한을 압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런 전술이 어디까지 통할 지 미지수라고 지적.

마. 러·북 관계

○ **北신문 "러시아와 친선발전은 공통 지향"(10/12)**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2일 구소련과 수교 60돌을 맞아 일제히 기념글을 게재하고 러시아와 친선협력 발전을 강조했음.
- 노동신문은 "조(북)러 친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요구이자 지향"이라며 "라진-하산철도 및 라진항

개건(개선) 착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것은 이러한 요구와 지향의 발현"이라고 주장했음.

- 신문은 "우리 나라와 러시아는 인방(隣邦)이며 조러 친선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서 "60년 전 외교관계가 설정된 후 조러 친선관계는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이익에 맞게 계속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고 호상(상호)이해도 깊이 했다"고 강조했음. 신문은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나 북.러 공동선언(2000.7)과 모스크바 선언(2001.8)을 채택한 것은 "전통적인 조러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운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했음.
- 민주조선도 "조선 인민은 러시아에서 강력한 국가건설과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음.

<테러지원국 해제>"늦은감..북.미 관계에 도움"<러 전문가>(10/12)

-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인 러시아 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김 예브게니 상임연구원은 11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후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에 일정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김 상임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왜 미국이 이 시점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는지가 사실 궁금하다. 애초 약속대로 8월에 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두 달간 긴장만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해온 적대적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완화시킬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북측과 관계 개선에 나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6자회담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 그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닌 북·미 간 문제일 수도 있다. 비핵화 문제를 남북 관계와 연관시켜 나가는 것도 현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6.15선언 정신, 10.4 정상회담 정신에 따라 남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어찌 됐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남북 관계가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음.
- 그는 특히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시켰다고 해서 이라크에 한 것처럼 북한을 너무 심하게 몰아서는 안 된다. 검증 패키지 프로그램에 의해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겠지만 군사 기밀까지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도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음.

○ 北 박의춘 외무상 15일 러시아 방문(10/11)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오는 15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10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러시아 외교 소식통을 인용, 보도. 이 소식통은 "박 외상이 1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음. 이번 회담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와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연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이달 초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북을 통해 핵심 쟁점인 북핵 검증 체계 수립과 그에 맞물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에 대해 북측과 일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이 어떤 대화를 오갈 지 주목됨.

○ 北주재 '러'대사관, 북.러 수교60돌 연회(10/10)

-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9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러 수교 60주년(10.12)을 앞두고 북한 내각 고위인물들을 초청, 연회를 열고 친선관계 증진을 강조했다고 북한의 평양방송이 10일 전했음. 연회에는 북측에서 박의춘 외무상과 궁석웅 외무성 부상, 김 철 철도성 부상, 리명산 무역성 부상 등이 참석했음.
- 발레리 수히닌 러시아 대사는 연설에서 "1948년 러.조(북) 사이에 외교관계가 설정된 이후 두 나라는 호상(상호)원조, 신뢰, 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친선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해 왔다"고 말했음. 그는 특히 지난 4일 열린 라진-하산 철도 및 라진항 개건 착공식이 "만족스럽게 진행됐다"며 "러.조 친선협조 관계가 선린,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해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계속 발전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음.

바. 기타

○ 美시판 평양소주 "인기 시들"(10/11)

- 지난 4월 미국에 상륙한 북한의 평양소주가 처음엔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현재는 소주맛과 통신.통행.통관의 어려움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고 평양소주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당씨 주류도매(Tang's Liquor Wholesales)' 대표 당갑정씨가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1일 전했음. 당갑정씨는 평양소주는 주문을 해도 제때에 공급되지 않고, 특히 특별관세가 붙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 소주에 비해 원가가 한 박스당 10달러 가까이 더 비싸다고 설명했음. 평양 소주는 현재 뉴욕과 뉴저지, 매릴랜드,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 5개 주에서 팔린다고 RFA는 전했음.

○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美국무부서 공연(10/7)

- 미국 순회공연중인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34)씨가 6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연주회를 가졌음. 이날 연주회는 국무부의 민주·

국제문제 담당 폴라 도브리안스키 차관과 인권·노동담당 데이비드 크라머 차관보의 주선으로 마련됐음.

- 김 씨는 평양 음악무용대학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뒤 1999년부터 평양 국립교향악단의 수석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 2001년 탈북했음. 그는 2003년 남한에 입국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주한미사령관 "한미, 북한 급변사태 대비"(10/9)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과 관련, 아직까지 특이동향은 없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음.
- 워싱턴을 방문중인 샤프 사령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김 위원장 건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새로운 게 없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주시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것 이외에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음.
- 샤프 사령관은 또 "한미 양국은 전면전 상황이든, 북한에서의 불안정 사태든 어떤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 군부에도 이상징후는 없다고 강조했음.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북핵 6자회담을 계속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핵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부연했음.
-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권 이양과 관련, 샤프 사령관은 "한국군이 오는 2012년까지 모든 준비를 갖출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음.
- 그는 주한미군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으로의 추가 차출 계획에 대해 한미 양국 대통령이 가까운 장래에는 한반도에서 동일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을 상기시키며 "지금으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 샤프 사령관은 전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우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는 등 이를 개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일을 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런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한미 동맹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겠지만 우리는 재빠르게 그들을 격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음.

○ 샤프 "전작권 전환後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10/7)

- 윌터 샤프 한미연합군사령관겸 주한미군사령관은 6일 현재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현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샤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기념비에서 미 육군협회(AUSA) 연례회의를 계기로 거행된 헌화식에 참석,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주한미군은 '가까운 미래(foreseeable future)까지는'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샤프 사령관은 '가까운 미래'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 후에도 상당기간"이라고 설명했음.
- 샤프 사령관은 또 "2012년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아니며, 양국간 연대는 여전히 공고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전작권을 넘겨받고 한국과 한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충분한 전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곁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그는 "10년만에 다시 한국에 부임해 4개월간 한국의 변화를 지켜본 결과, 장병의 직업정신과 능력이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넘겨받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음.

나. 한·중 관계

○ 中, 해경사망 사건에 유감 표명(10/7)

- 중국 정부가 자국 선원들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검문에 나선 우리 해양경찰관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공식 표명했음.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으로 한국인 1명을 숨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음. 친 대변인은 "한국 수사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한국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음.
-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선원 11명은 지난달 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기잡이를 하다 단속을 위해 배에 오르려던 우리 해양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둘러 박경조(48) 경위를 숨지게 했으며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음.
- 친 대변인은 최근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북한 경비정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의해 피격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음. 그는 "중국의 어선이 서해상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하던 과정에서 포탄을 맞아 선장이 크게 다쳤다"면서 "중국은 관계 기관과 함께 대화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 지난 27일 오전 9시40분께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

국어선 요동운 146호가 북한 경비정으로 보이는 선박으로부터 발사된 포탄 2발을 맞아 선장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음.

中, 한·중·일 금융정상회담 제안에 미온적(10/7)

- 중국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제안한 한·중·일 금융정상회담과 관련, "3국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음.
-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제안에 대해 일차적으로 확인한 결과 아직 3국간 금융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다"면서 "한국이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3국의 유관 부문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음. 그러나 친 대변인은 "국제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시아의 주요 경제대국인 한·중·일이 밀접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음.
- 이 대통령은 6일 "베이징에서 10월 열릴 ASEM 정상회의(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한·중·일 금융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말했고 앞서 지난 3일에는 역내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의 추진을 제안한 바 있음.

다. 미·중 관계

中, 美대선후보에 대만 무기판매 경고(10/9)

-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중국이 9일 차기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을 반복해 중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미 대선 후보들에게 경고를 보냈음.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않을 경우 중미 관계에 긴장을 유발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대선 후보들이 이를 이해하고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미국은 지난주 대만에 아파치 헬기 30대와 패트리엇 미사일 330기 등 6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중국은 이 계획이 양국간 군사적인 신뢰를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중단했음.
- 한편 미국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공통적으로 대(對)대만 무기판매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중미간 긴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中, 美와 군사교류 중단 사실상 시인(10/7)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행위는 군사교류를 포함한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말해 미국과 군사 교류를 중단키로 했음을 사실상 인정했음.

- 친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기어코 대만에 무기를 수출해 중·미 관계를 손상하고 중국의 이익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쳤다"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만과의 군사관계도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 그는 '이미 군사교류를 중단했느냐?', '중단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란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은 미국에 이번 사안과 관련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면서 "구체적인 교류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음. 그는 또 군사교류 중단 사실을 발표하며 중국의 군사력에 관해 논평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을 강하게 비판했음.
- 친 대변인은 "미 국방부 대변인이 중국의 군사력이 확대되고 발전 방향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과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계속 견지함으로써 패권주의를 지양하고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 미 국방부는 지난 3일 대만의 군 현대화를 지원하고자 패트리엇 미사일과 아파치 헬기를 포함한 64억 6천만달러(7조9천억원)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음.

中 "힐 방북 협상 유익했다"(10/7)

- 중국은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사흘간 방북해 북한과 진행한 협상에 대해 유익했다고 평가했음.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힐 차관보가 방북 기간 북한과 길고도 실질적인 회담을 나눴다"면서 이같이 평가하고 "중국은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음.
- 친 대변인은 "힐 차관보가 방북 후 지난 4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면서 "기로에 선 6자회담이 각국의 밀접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계속 진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음.

라. 미·일 관계

부시 日총리와 협의..납치자문제 日입장 지지(10/12)

- 부시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6자회담의 목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내는 것이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모든 당사국들이 계속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의 고든 존드로 대변인이 밝혔음. 백악관의 고든 존드로 대변인은 "미국은 납치자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일본을 입장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하기 앞서 이날 아침 아소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존드로 대변인은 설명했음. 이어 미 국무부는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음.
-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밝혔음.

日 "北, 美테러지원국 명단서 제외는 시기상조"(10/10)

-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조치는 북핵 검증작업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일본 정부의 고위 관료가 10일 주장했음.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즉각 제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이와 관련해 일본과 좀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이는 앞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이르면 이날(현지시간) 제외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및 폭스뉴스가 보도한 데 대한 일본의 공식 반응.
-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이달 13일로 끝나는 북한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 북한에 대한 독자적 경제제재 시한을 6개월 연장키로 결정했음. 일본은 1970~1980년대 일본 민간인 납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선결과제로 제시하며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불가하다는 입장.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검증절차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유효한 검증절차의 확보"라고 말했음.

"美, '북미협의 성과시 테러지원국 삭제' 日 통보"<교도>(10/9)

- 미국이 핵프로그램 검증을 둘러싼 북.미 협의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달 중순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일본측에 통보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9일 보도. 그러나 통신은 테러지정국 해제의 조건으로 제시한 일정한 합의가 무엇인지 등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참고 1] 〈테러지원국 해제〉 북핵 일지(연합뉴스, 10/12)

북한이 1987년 저지른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을 이유로 미국은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그에 따른 각종 제재를 북한에 가했고, 북한은 이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해제를 늘 대미관계의 당면 목표로 추구해왔음.

다음은 지정부터 해제까지 20년사.

▲1988. 1.20 = 미 국무부,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1992. 4.30 = 미 국무부, 국가별 테러리즘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1987년 이후 국제테러리스트 공격을 지원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계속 지정

▲1998. 9.28 = 북.미 워싱턴서 테러지원국 해제 위한 실무회담

▲2000. 1.30 = 북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북미관계 개선에 중요하다고 강조

▲2000. 3. 8~15 = 북.미 뉴욕서 고위급회담 개최 준비 접촉,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논의

▲2000.10. 6 = '국제테러에 관한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테러행위 반대 국제적 노력 지지"

▲2000.10.12 = 북.미 공동코뮤니케, 반테러 입장 발표

▲2001. 9.12 = 북 외무성, 9.11 테러행위를 비난하고 테러 반대 입장을 재천명

▲2004. 4.30 =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테러지원국 해제에 납북 일본인 가족의 송환 문제를 연계

▲2007. 1.16~18 = 북.미 베를린 회담,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논의키로

▲2007. 9. 2 =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지정 해제 합의

▲2007.10.3 = 6자회담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개시를 포함한 '9.19 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 합의

▲2008. 4.30 = 미 국무부, 연례 테러보고서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해제" 명시

▲2008. 6.10 = 북한 외무성, "온갖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며, 반테러 투쟁에서 유엔성원국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천명. 2000년 7월 19일 북.러공동선언과 2001년 8월 4일 북.러 모스크바선언에서 국제테러에 반대하는 협력을 명시하고, 1998년 8월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국 대사관들에 대한 폭탄공격과 2002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공격, 2003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폭탄폭발 사건을 비롯해 "엄중한 테러행위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를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다"고 강조.

▲2008. 6.26 = 조지 부시 미 대통령,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따라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방침을 미 의회에 통보. 하워드 버먼 미 하원 외교위원장 "북한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 고무적" 성명

▲2008. 6.27 = 북 외무성, 테러지원국 해제 착수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조치 "환영"

▲2008. 7. 4 = 북 외무성,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며 6자회담 참가국에 10.3합의 의무 이행을 촉구

▲2008. 7.24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싱가포르 기자간담회서 "45일간의 의회 통보기간은 최소한의 통보기간"이라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발효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

▲2008. 8. 6 = 부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서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인 8월 11일을 북한의 "첫번째 기회"라고 강조

▲2008. 8. 7 = 곤잘로 갈레고스 미 국무부 부대변인, 테러지원국 해제 전 "강력한 검증체계 확보" 강조

▲2008. 8.11 =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 "북한이 강력한 핵검증 체제에 합의하기 전엔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 않을 것" 확인

▲2008. 8.26 = 북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가 10.3합의 위반이라며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고려한다는 입장 발표

▲2008. 9.19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 발표

▲2008.10. 1~3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핵검증 원칙 논의

▲2008.10.9 = 日교도통신 "미, 10월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日에 통보"

▲2008.10.11 자정 = 미 국무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hanarmdri@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10/12/0511000000AKR20081012000400014.HTML

[참고 2] 〈美-북한, 핵검증 합의 全文〉 (연합뉴스, 10/12)

미국 국무부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를 발표하면서 그간의 협의진행 상황과 핵검증에 관한 합의 내용을 설명했음.

다음은 국무부의 발표 내용 전문.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성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수단의 중요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올해 7월 만나 검증수단에 관해 협의하고 당사국들간에 문서 초안을 교환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7월12일 검증방안에는 북한내 시설방문과 문서검토, 기술진을 상대로 한 인터뷰, 6자회담 당사국들간에 만장일치로 합의된 여타 방안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언론발표문을 내놓았다.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을 대표해 미국의 협상팀이 10월 1~3일 평양을 방문, 검증방안에 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의를 토대로 미국과 북한 협상팀은 중요한 검증수단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6자회담 당사국의 전문가들이 검증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검증에 중요한 자문과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에 의해 접근한다.
-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 검증체계에 포함된 모든 조치들은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된다. 여기에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이미 합의된 감시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이러한 검증수단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합의는 양국간 공동 문서와 여타 약정으로 성문화됐으며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재확인됐다.

합의내용과 부수된 양해사항은 여타 당사국들에게도 전달됐다.

검증수단들은 가까운 미래에 6자회담 당사국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채택될 검증의정서의 기준선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이 6월 26일 제출한 핵신고서의 검증은 5월8일 제출된 영변 핵시설의 가동기록에 관한 1만8천쪽이 넘는 문서의 검토작업과 함께 이미 시작됐다."

shpark@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10/12/0511000000AKR20081012003100071.HTML

국제관계연구실 제공